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즉시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12월 13일(수)

산재예방시설 용자사업, 내년에 1천억 원 이상 증액

- 사회수석, 민생현장 첫 방문,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 -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12/12, 화) 오후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용자사업을 올해 3,553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린 4,58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